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 및 미(未)가입 요인의 분석 : 한국, 중국, 일본, 인도의 사례

서진희\*·김 현\*\* 경희대학교

## 논문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2020년 11월에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한 각각의 요인들과 인도가 가입하지 않은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국제레짐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첫째, 한국이 가입한 주요 요인은 신자유주의 이론의 설명대로 교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예상하듯이 아세안과의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에서 한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중국이 RCEP에 가입한 주요 요인도 경제적 이득인데 이는 신자유주의 이론의 설명과 부합된다. 또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예상하듯이 중국은 역내에서 주도적으로 다자적 통상협력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지위와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것이다. 셋째, 일본도 신자유주의 이론이 예상하듯이 주로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여 RCEP에 가입하였다. 또한 RCEP을 통해 수준 높은 다자적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 이론으로 설명된다. 반면에 인도가 RCEP에 가입하지 않은 주요인은 중국에 대한 상대적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어 자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 이론에 의해서 적절히 설명된다.

**주제어**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국제무역레짐, 다자적 자유무역협정,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신현실주의

\* 주저자 \*\* 교신저자

## I. 서론

이 논문은 무역 분야의 새로운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으로서 2020년 11월 15일에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에 역내 주요 국가인 중국, 일본, 한국이 왜 가입했으며, 협상에 참여했던 인도가 최종적으로 왜 가입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국제레짐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RCEP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써 아세안(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정식 서명하여 참여하고 있다. 협정의 발효 요건은 아세안 서명국 중 최소 6개국과 非아세안 서명국 중 최소 3개국이 국내 비준을 받는 것인데 2022년 1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RCEP은 아시아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명시적인 원칙과 규칙, 정책결정 절차 등을 포함하는 다자간 무역협정 형태의 국제레짐이다.

RCEP은 아세안이 2011년 11월 제19차 정상회의에서 이전에 일본이 제안했던 ASEAN+6(인도 포함) 형태의 FTA를 제안하여 2012년 11월에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후 약 8년 동안 총 31차례 공식 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등을 거쳐 최종 타결되었다.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을 포함한 2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품무역의 관세 철폐 수준은 품목 수 기준 약 92%로서 20년에 걸쳐 시행하기로 되어있다. 또한 원산지 규정에서는 누적 기준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RCEP 당사국 내에서 다른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과 재료는 그 최종상품이나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하는 기준이다.<sup>1)</sup> RCEP의 전 세계 비중은 2019년 세계은행 기준으로 GDP 25조 8,000억 달러(29.5%), 인구 22

1) RCEP 협정 전문은 <https://www.fta.go.kr/rcep/doc/1/> 참조.

억 7,000만 명(29.5%), 교역 12조 5,000억 달러(25.4%) 규모로 전 세계 1/3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오수현 외 2020).

이 논문의 연구 사례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이 제기된다. 첫째, TPP나 CPTPP에 가입하지 않던 한국이 왜 RCEP에 가입하였는가? 둘째, 중국은 왜 아세안이 제안한 RCEP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는가? 셋째, 왜 일본은 CPTPP의 출범을 주도하면서 경쟁 관계에 있는 RCEP에도 참여하는가? 넷째, 인도는 경제적 상호이득을 예상하여 장기간 협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협상 타결의 막바지에 가입을 포기했는가?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이 RCEP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입한 요인들과 인도가 예상되는 상호이득에도 불구하고 불참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국제레짐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한다. RCEP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RCEP이 회원국이나 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거나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협정문 내용을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류였다.<sup>2)</sup> 이 논문은 RCEP 협상에 참여했던 아시아 주요 4개국의 RCEP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작용한 요인들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새로운 국제무역레짐인 RCEP에 한국, 중국, 일본이 가입한 요인들과 인도가 가입하지 않은 요인들을 국제레짐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 4개국의 RCEP 가입 및 미가입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론적 시각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논문의 제2장에서는 국제레짐에 관한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이론과 신현실주의 이론의 핵심 주장들을 서술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적 명제들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이 가입한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론적 명제들을 통해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미(未)가입국으로서 인도가 가입하지 않은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

2) 이러한 기존의 연구로서 Drysdale and Armstrong(2021); Kimura(2021); Sharma(2021); 김민성(2020); 김희중(2021) 등이 있음.

론적 명제들을 통해 설명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론적 함의를 제시한다.

## II. 이론적 논의와 명제

국제협력의 조건과 국제레짐을 포함한 국제제도의 창출 및 유지에 관한 이론적 논쟁은 주로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neoliberal institutionalism, 이하 ‘신자유주의’로 약칭함)와 신현실주의(neorealism) 이론 사이에서 전개되어왔다.<sup>3)</sup> 우선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들이 어떤 쟁점 영역에서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상호이익을 갖고 있을 때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Keohane 1984, 6, 247). 그러나 이러한 상호이익의 존재가 효과적인 협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는 협력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들이 존재한다. 즉 상호 신뢰의 부족, 협력의 거래비용, 상대방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 합의의 불이행 가능성 등으로 인해 협력을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들이 효과적으로 협력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제레짐을 창출하고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국제레짐’을 간략히 정의하면 “국제관계에서의 특정 쟁점 영역과 관련하여 정부들이 합의한 명백한 규칙들을 가진 제도”이다(Keohane 1989, 4).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에 따르면 국제레짐은 “국제관계의 특정한 쟁점 영역을 둘러싸고 행위자의 기대가 수렴되는 묵시적 혹은 명시적 원칙, 규범, 규칙, 정책 결정 절차의 집합”을 의미한다(Krasner 1983, 2). 신자유주의 이론에 따르면 국제레짐은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수행함으로써 협력의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완화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첫째로 국제레짐은 상대 국가들의 목표, 공약, 국제협정 준수 여부에 관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3) 제2장에서 이론적 논의는 邢思遙·김현(2020, 96-98)의 이론적 논의를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써 상대국의 의도와 행동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준다. 둘째, 국제레짐은 국제협정을 협상하고 이행하며 합의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감시하는데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여준다(Keohane 1984, 85-97). 셋째, 국제레짐은 협력의 쟁점들이 서로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협력의 기회와 이득을 증대시킨다(McGinnis 1986). 넷째, 국제레짐은 당사국들이 상호작용을 반복하고 여러 쟁점에 관해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비협력의 동기를 억제하고 협력을 촉진한다(Keohane 1984, 244-245; Axelrod & Keohane 1985, 232-234). 국제레짐이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들은 협력을 통해 상호이득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제레짐을 창출하거나 기존의 국제레짐에 참여한다.

반면에 신현실주의 이론에서는 대부분의 쟁점 영역에서 국가 간 협력의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한다. 즉 국제협력이 당사국들에게 상호이득을 가져다주더라도 종종 협력에 실패하는데 그 이유는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신현실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들은 협력을 통해 자국의 절대적 이득을 최대한 증대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상대국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여부도 중시한다. 국가들의 주된 목표는 상대적 이득과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우세한 힘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신현실주의자들은 국가들이 국제협력을 통해 절대적 이득이 발생하더라도 상대적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협력을 꺼릴 것으로 예상한다(Grieco 1988, 498-499). 이러한 시각은 국가들이 협력을 추진할 때 주로 자국의 절대적 이득을 중시하고 이득의 배분 상태를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이득이 대부분 경우 협력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대조된다.

무정부 상태의 국제체제에서 국가 간 협력이 매우 어렵다고 주장함에도 신현실주의자들은 국제레짐의 창출과 유지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는데 크래스너(Stephen Krasner)와 그리에코(Joseph Grieco)의 이론이 대표적이다. 우선 크래스너(1993a, 140)는 국제레짐이 형성되는 것은 “국가 간 힘과 이득의 분포가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즉, 국가

들이 국제레짐을 통해 유리한 힘과 이득의 분포상태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국제레짐을 창출하거나 참여한다(Krasner 1993b, 235, 241-247). 국가들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상대적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 국제레짐을 창출한다고 파악하는 것이다(Leonard 2005, 113-114).

그리코 역시 국가 간 협정인 국제레짐이 협력 이전의 힘의 분포상태를 유지하는 이득의 분배를 가져다주는 경우에만 국가들은 국제레짐에 참여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들은 “방어적 힘의 지위 추구자(defensive positionalists)”이기 때문이다(Grieco 1990, 37-47). 한편 신현실주의자들은 국가가 국제레짐에 참여함으로써 절대적 이익을 얻더라도 상대국이 더 큰 이익 얻음으로써 능력을 증대시켜 자국의 상대적 지위가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면 국제레짐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것이라 예상한다(Grieco 1988, 498-499; 1993). 즉 국가는 국제레짐을 통해 여타 국가의 상대적 힘의 지위가 상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국제레짐의 창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RCEP은 아시아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명백한 원칙, 규칙, 분쟁 해결 절차 등을 포함하는 국가 간 다자 협정 형태의 국제레짐이다. 한국, 중국, 일본이 RCEP에 가입한 요인들과 인도가 가입하지 않은 요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국제레짐에 관한 두 이론적 시각의 핵심 주장들에서 도출한 이론적 명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신자유주의:

<명제 1> 국가들은 국제레짐을 통한 협력이 상호 간에 절대적 이득을 효과적으로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하면 해당 국제레짐의 창출에 참여할 것이다. 반면에 절대적 이득을 효과적으로 가져오지 않을 것을 예상하면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신현실주의:

<명제 2> 국가들은 국제레짐을 통한 협력이 기존의 자국의 상대적 힘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킬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에만 해당 국제레

짐의 창출에 참여할 것이다.

<명제 3> 국가들은 국제레짐을 통한 협력이 자국에 상대적 손실을 초래하여 상대적 힘의 지위가 저하될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 해당 국제레짐의 창출에 참여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이다.

### Ⅲ. RCEP 가입 요인 분석: 한국, 중국, 일본 사례

#### 1. 한국

한국은 2012년 RCEP의 초기 논의에도 참여하였고 2013년 5월 제1차 공식 협상이 시작한 이래로 2020년 11월 최종 서명까지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해왔다. 특히 한국은 2015년과 2017년에 2차례 협상 회의를 유치하였고 협상 막바지 단계인 2020년부터 비(非)아세안국가들의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주요 쟁점에 합의를 이루는데 기여하였다. 한국이 RCEP에 참여한 주요 요인은 무엇보다 경제적 이득이다. 첫째, 2013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RCEP의 기대효과를 예측했는데 RCEP이 발효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후생, 수출입 모두에 긍정적 효과를 예상하였다. 특히 실질 GDP는 중장기적(10년)으로는 약 1.21~1.76%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중장기적으로 113.51억 ~ 194.56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파악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2019년 연구에서도 RCEP이 발효되면 인도가 불참하는 경우 실질 GDP가 0.41~0.5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42.46~54.7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오수현 외, 2019). 또한 RCEP 참여국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교역은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액의 49.6%, 전체 수입액의 46.3%로 거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RCEP이 발효되면 역내 국가 간 수입 관세가 기존의 FTA 수준을 넘어서 92%까지 철폐되어 한국의 역내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산지 누적 기준 조항이 마련되어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쳐 만들어진 제품에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역내

참여국 간 공급 사슬이 강화됨으로써 한국 기업들은 역내 회원국들에 생산기반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교역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산업통상자원부 2019). 또한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등과 관련된 통합된 통상 규칙이 확립되어 기존 FTA를 보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둘째, 한국 정부는 RCEP을 통해 아세안과의 기존의 FTA에 비해서 교역, 특히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아세안은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제2위 교역대상이자 제3위 투자대상이고 2007년 한·아세안 FTA가 발표된 이후에 매년 교역량 증가와 더불어 무역 흑자도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RCEP이 발효되면 아세안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기존의 관세(79.1~89.4%)가 추가로 철폐되어 국별 91.9~94.5% 수준으로 높아지면 수출액과 품목도 더욱 증대되어 무역 흑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산업이 고율의 수입 관세가 철폐되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한국은 아세안 회원국과 비교해서 서비스 교역에서 우위에 있는데 RCEP으로 인해 한류 덕분에 서비스 부문에서 문화콘텐츠, 유통, 물류의 시장개방 수준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산업통상자원부 2020, 4-5).

셋째, RCEP은 한국이 그동안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FTA를 체결하지 못했던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일 교역은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둘러싼 정치·외교적 갈등,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수출 규제로 발생한 경제 갈등이 본격화된 2019년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의 양국 간 교역규모가 11.9% 감소했고 한국의 제조업 분야 대일 직접투자도 25.6% 감소하였다(한국경제연구원 2021), 그러나 RCEP이 발효되면 양국의 상품 관세가 83%까지 철폐되고 다양한 분야의 비관세장벽도 낮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양국 교역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RCEP 협상에서 상대적 이익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즉 관세 철폐 수준은 전체 품목 수의 83%로



같으나 수입액으로 일본이 2% 포인트 추가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의 주요 민감 품목이 양허에서 제외되고 개방 품목의 경우에 장기적으로 관세를 줄이는 비선형철폐 방식을 적용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20, 5).

이러한 경제적 이득과 함께 RCEP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가속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신남방정책은 2017년 11월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기로 천명한 새로운 외교정책으로서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국가들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주변 4강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이유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자 거대 소비시장인 아세안 및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2018년 8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아세안 및 인도와 인적 및 문화 교류, 무역 및 투자 확대, 비전통 안보(사이버안보, 해양안보, 환경안보 등) 분야의 94개의 사업을 추진해왔다.<sup>4)</sup>

한국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주요 추진과제의 하나로서 RCEP의 타결을 통해 역내 국가들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것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RCEP이 타결되면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협력의 다각화와 다양한 결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다(청와대 2020). 한국은 RCEP 가입국 및 신남방정책의 대상국이 일치하기 때문에 RCEP을 통한 교역의 증대와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다양한 신남방정책 사업의 추진을 통해 역내 국가 간 협력과 공동문제의 해결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국이 RCEP에 참여한 또 다른 요인은 역내에서 중견국으로서 지위를 높이고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함이다(청와대 2019). 한국은 RCEP 협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특히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는 非 아세안 조정자 역할을 맡으면서 원산지 규정 등 다양한 이

4)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http://www.nsp.go.kr/kor/policy/policy2.do> 참조

슈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하며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산업통상자원부 2020, 2). 특히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들과도 수시로 물밑 접촉을 하며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을 때 협상의 진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이 RCEP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주된 이유는 RCEP을 통한 경제적 이득 때문이었지만 협상 초기부터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진하는데 한국이 수행하는 역할과 비중을 증대하려는 의도도 있었기 때문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13, 3-4). 특히 RCEP 협상이 진전될수록 한국은 능동적으로 논의를 중재하며 적극적으로 합의된 무역 원칙과 규칙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은 그동안 아세안과의 관계에 있어 중국과 일본에 대해 지위와 영향력의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RCEP 가입과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통해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을 증대하고 더불어 사회, 문화, 인적 교류 등 전방위적 협력을 확대해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높이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9, 4; 2020, 3).

한국이 RCEP에 가입한 이러한 요인들은 신자유주의의 <명제 1>에 의해 적절히 설명된다. 우선 RCEP 참여를 통해 절대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함이다. 즉, 한국은 역내 회원국들과의 교역 및 투자의 확대를 통한 무역 흑자, 이에 따르는 경제성장과 소비자 후생 효과를 예상하여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아세안과의 교역을 증대하여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을 증대하고 서비스 교역을 확대하여 기존의 FTA의 효과를 넘어서는 절대적인 경제적 이득을 달성하기 위해 RCEP에 가입한 것이다. 또한 일본과의 FTA 효과를 기대하고 중국과의 교역조건을 개선하여 교역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국이 RCEP에 가입한 또 하나의 요인은 절대적인 경제적 이득과 더불어 역내에서 상대적인 지위와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특히 RCEP 참여는 한국 정부가 아세안과의 다방면의 협력관계를 확대할 목표로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주요 과제로서 이행된 것이다.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의 <명제 2>에 의해서 적절히 설명된다. 즉 한국 정부는 RCEP을 통해 아세안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이던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증대시

킬 것으로 판단해서 가입한 것인데 이는 <명제 2>의 논리에 부합된다.

## 2. 중국

중국은 RCEP을 제안한 아세안과 더불어 협상과 타결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동안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세안+3을 제안하였고 RCEP과 경쟁 구도에 있는 TPP에 미국이 2010년에 가입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제안해왔던 아세안+6 형태의 RCEP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김희중 2021, 143). RCEP 협상이 시작되면서 중국은 아세안 회원국들의 조정자로 활동하며 아세안 의장과 공동의장을 맡아 조속히 협상을 진전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이처럼 중국은 RCEP 협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기 타결 의지를 보이며 다른 회원국에 대해 타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와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해왔다.

중국이 RCEP 협상과 타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요인은 무엇보다 RCEP 가입을 통해 얻게 될 경제적 이익 때문이었다. RCEP 타결 직전에 발간된 미국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IIE)의 보고서에서는 RCEP이 이행된다면 2030년에 역내 연간 소득 증가가 1,860억 달러(약 20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리고 주요 수혜국은 중국, 일본, 한국이 될 것이고 중국이 최대 수혜국으로서 약 850억 달러의 연간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RCEP은 2030년에 세계 수출액을 5,000억 달러 증액시킬 것이고 이중 중국의 수출 증가액이 2,480억 달러로서 49.6%를 차지함으로써 중국이 최대 수혜국이 될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주요 수출 부문별로는 원자재가 5%, 경공업 제품이 6.7%, 첨단 제품이 4.4%, 국내 서비스 4.6%, 무역 서비스가 8.8%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Petri and Plummer 2020, 21-22).

2020년 상반기부터 중국의 최대교역국이 EU에서 아세안으로 바뀐 만큼 RCEP 협정으로 중국이 역내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더욱 증가

할 것이 예상된다. 그동안 중국은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을 중시해 왔으며 RCEP을 통해 더욱 확대될 것을 기대해왔다(중국 외교부 2016). 또한 RCEP 협상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원산지 규정이 누적 기준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됨으로써 RCEP 회원국들은 제품의 공정 과정이 분산되어도 단일 지역에서 생산되는 효과가 발생해 중국의 대 아세안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오수현 외 2019).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여 아세안, 한국, 일본 등과의 교역을 확대해 새로운 시장과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중국이 RCEP을 통해 얻을 것으로 예측되는 2030년 기준 실질 소득 증가액이 무역 분쟁으로 예상되는 손실액 3,040억 달러의 1/3을 상쇄시킬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Petri and Plummer 2020, 13). 또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양국 간 교역이 위축되면 축소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무관세 혹은 낮은 관세의 수입 물량을 RCEP 회원국들로부터 확보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 이러한 경제적 이득에 대한 계산에서 중국은 2021년 3월에 회원국 중 가장 먼저 국내 비준을 마쳤고,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어 회원국들이 경제적 혜택을 얻기 위해 국내 비준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였다(Xinhua 2021/3/8).

중국이 RCEP 협상을 주도하고 가입한 또 다른 요인은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RCEP 협상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역내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계산한 것도 있지만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에 TPP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아태 지역에서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있었다(Shimizu 2021, 9). RCEP 타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3월에 TPP로부터 탈퇴하면서 가속화되었다.

중국은 아시아 금융과 무역 분야에서 미국의 우월한 지위와 영향력을 견제하고 약화시키기 위해 다자주의적 국제제도를 구축하려는 노력

을 기울여왔는데 대표적 사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과 RCEP이다. 우선 중국은 국제금융체제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견제하고 아시아 역내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금융에서 우세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에 AIIB를 주도적으로 창설하였다(Chow 2016, 1272-73). 또한 중국은 RCEP을 통해 역내 무역 자유화와 이를 토대로 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추진하려 하는데 미국의 영향력 없이 자국에 유리한 통상 규칙을 확립하려는 의도가 있다. 영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의 일본 연구책임자인 워드(Ward 2020)는 RCEP이 경제적 상호의존을 심화시켜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RCEP의 타결이 중국의 지정학적 승리라고 평가한다. 또한 중국이 RCEP 역내에서 통상규칙과 기준을 정하는데 자국의 경제력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PIIE 보고서도 경제적 이득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인도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RCEP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리더십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Petri and Plummer 2020, 22-23).

중국은 또한 RCEP에 참여함으로써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Wang and Sharma 2021, 49, 52). 중국 정부는 이미 2010년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여 교역을 확대해왔고, 2013년 출범한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사업에 아세안 6개 회원국(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을 포함하여 이 국가들에 대한 중국 기업의 직접투자와 인프라 건설 사업을 대폭 확충해왔다. 일대일로 사업은 두 가지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국-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중국-동남아시아-인도를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이다.<sup>5)</sup>

싱가포르 United Overseas Bank(UOB)와 홍콩과기대 연구소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2014년~2018년에 이들 아세안 6개국에 대한 중국 기

5)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내용과 정책 추진에 관해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참조.

업의 연간 직접투자는 일대일로 사업 이전인 2010년~2013년 대비 85%, 건설 사업은 33% 증가하였다(UOB et al. 2020, 11). 중국은 RCEP을 일대일로 사업과 연계해서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동아시아에서 중국 주도의 다자주의의 틀을 구축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나아가 약화시키려 한다. 이와 관련해서 2014년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차관보는 아시아의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무역 협력은 일대일로 사업의 우선순위로써 역내 경제를 통합하고 아세안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을 위해 RCEP 협상을 추진한다고 역설하였다(중국 외교부, 2014). 이론적으로나 실제에 있어 인프라 건설과 무역, 경제발전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또한 일대일로 사업의 주요 내용 중에 인프라 건설 협력과 상호 간 투자 및 교역 촉진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주요 대상인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서 자국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RCEP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Yoo and Wu 2021, 7-8).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 RCEP의 연계 추진은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 이래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전략적 부상에 대응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안보전략이다. 여기서는 중국을 역내의 안정과 현상을 타파하려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강화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도, 뉴질랜드, 주요 아세안 국가(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9).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억제정책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일대일로 사업과 RCEP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미국이 TPP를 탈퇴하고 RCEP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RCEP을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 역내에서 미국의 영향력 없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다자주의 메커니즘을 발전시킬 기회로 간주하고 있다(Hu and

Meng 2020, 167-168).

또한 RCEP이 이행되면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적, 전략적 경쟁에서 상대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테라다(Terada 2018)는 중국이 거의 모든 RCEP 회원국들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어서 이들의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줄게 되고 CPTPP나 RCEP에 참여하지 않는 미국의 수출품과 비즈니스가 동아시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미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한다. 또한 일본, 한국, 호주와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전략적 동반자 국가들이 RCEP 회원국으로서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심화하면 중국의 전략적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게다가 PIIE 보고서에 따르면 RCEP이 발효되면 2030년 기준으로 중국,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각각 30억 달러 증가하는 반면에 여타 RCEP 회원국에 대한 수출은 3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 및 일본과 여타 RCEP 회원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각각 970억 달러, 540억 달러 증가한다는 예측과 비교하면 미국에 대한 중국의 상대적 이득은 상당히 크다. 양국 간 무역에서도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가는 190억 달러인데 미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는 30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되는데 중국의 상당한 대미 무역 흑자가 예상된다(Petri and Plummer 2020, 17). 이러한 수치들은 RCEP을 통해서 중국이 미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한편, 역내에서 중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높이고 자국에 유리한 다자적 통상 질서를 구축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중국이 RCEP 협상과 타결에 적극적이었고 신속히 국내 비준한 요인들을 파악한 이상의 논의는 신자유주의의 <명제 1>의 설명과 부합한다. 즉, <명제 1>이 예상하듯이 중국은 무엇보다도 RCEP을 통한 협력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RCEP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아세안과의 교역을 확대하고 일본과 한국과의 FTA 체결 효과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증대시키려고 RCEP에 참여하였다고 파악된다. RCEP의 경제적

효과에 관해서 활용 가능한 중국 정부나 국책 연구기관의 공식 자료는 없으나 권위 있는 PIIE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RCEP의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라는 예측이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 파악한 중국의 RCEP 가입의 다른 요인들은 신현실주의의 <명제 2>에 의해 적절히 설명된다. 우선 중국은 미국이 추진했던 TPP에 대응하여 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RCEP 협상을 추진하였다. 또한 중국은 RCEP을 통해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자주의 통상 질서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RCEP 참여 결정의 요인 중 하나이다. 또한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RCEP과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추진 중인 일대일로 사업을 연계시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와 영향력을 견제하고 약화시키는 한편, 자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높이려고 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RCEP을 통해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에 대한 상대적인 경제적 이득에 의해 뒷받침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신현실주의의 <명제 2>의 논리와 부합된다.

### 3. 일본

일본은 2021년 4월 28일에 RCEP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을 마쳤다. 이는 중국과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이다. 그만큼 일본이 RCEP의 이행에 큰 관심과 이익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무엇보다 절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RCEP에 가입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집권 초기인 2013년 3월에 일본 정부가 TPP 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며 “TPP가 향후 RCEP과 아·태지역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sup>6)</sup>로 발전할 것이고 향후 일본은 새

6)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 자유무역지대를 창출하는 계획으로서 APEC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임. 실현 가능성에 관한 APEC 회원국 간 공동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미·중 간의 의견 차이로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음.



로운 FTA 역내에서 새로운 통상 규칙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rime Minister of Japan and His Cabinets, 2013a). 일본은 역내 다자적 FTA를 추진하려 할 때 국내적으로 농업과 일부 산업 분야 등에서 반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집권과 함께 TPP와 RCEP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정부가 중국과 다르게 TPP와 RCEP를 서로 경쟁적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다자적 FTA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일본은 TPP를 촉매제로 해서 RCEP과 중장기적으로 역내 FTAAP를 창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또한 TPP와 RCEP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추진과 참여는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아베 총리의 경기부양책과 맥을 같이 하였다. 즉 일본은 역내 일련의 추가적인 경제개방을 통해 경제회복과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14년 5월 아시아 안보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역내 법의 지배를 강조하며 TPP가 역내에 가져다줄 경제적 혜택을 기대하고 이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어 RCEP과 FTAAP를 더욱 가속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을 표명하였다(Prime Minister of Japan and His Cabinets 2014). 즉, 일본은 역내 다자간 FTA를 서로 병행 추진하면서 하나의 무역협정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활용해 다른 무역협정에서도 유사한 이익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베 정부는 TPP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RCEP 국가들에 대한 투자 제한 및 관세 철폐에 관한 고위급 합의로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TPP를 RCEP의 속도 조정자(pace-setter)로 간주하였다(Mulgan 2013).

2020년 11월 RCEP 협정이 최종 타결된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RCEP이 시장 접근을 개선하여 수출이 확대되고 지식재산권이나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통상규칙을 확립함으로써 역내 무역과 투자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이라 예상하였다(일본 외무성 2020). 2021년 3월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RCEP이 이행되면 일본의 실질 GDP가 약 2.7%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2019년 실질 GDP 기준으로 15조 엔(円)(약 1,380억 달러)이 증가하는

것이다. 2.7% 상승 폭은 수출 0.8%, 투자 0.7%, 민간 소비 1.8%, 정부 소비 0.5%의 증가분과 수입 1.1% 감소분의 합계이다. 또한 2019년 취업자 기준으로 약 5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한다(일본 외무성 2021). 이는 일본이 체결한 다른 다자간 FTA에 비해서 높은 수치이다. 2017년에 일본 정부는 EU와의 FTA를 통해 실질 GDP의 1% 상승, CPTPP를 통해서도 약 1.5%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Reuters 2021/3/19).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아시아경제연구소(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IDE)의 보고서에서는 RCEP이 2021년 말에 발효되면 일본 GDP가 2030년까지 0.66% 증가하고, 한국은 0.24%, 중국은 0.13%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RCEP은 수출입 증대를 통해 일본의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었다(IDE 2021). 특히 비교우위가 있는 공산품(자동차부품, 철강제품, 가전제품 등) 수출에 대한 관세가 91.5%까지 철폐되고, 수입에서는 일본의 5가지 주요 농산물인 쌀, 밀, 옥류, 유제품, 설탕에 기존의 수입 관세를 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역내 값싼 농산물의 대량 수입을 막아서 국내 농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Akimoto 2021). 또한 RCEP이 발효되면 기존에 FTA가 없던 중국과의 교역이 증대되고 경제적 상호이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은 일본의 제1위 교역상대국이다. RCEP 협정이 발효되면 중국에 수출하는 일본 공산품의 86%에 대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수출품의 8%에만 무관세인 현행 수준과 비교하면 상당히 확대된 수준이다. 반면에 일본은 중국 수입품의 88%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되어있다. 이러한 비율도 현행 약 60%에 비하면 어느 정도 확대된 범위이다(Zhang 2021). 이러한 양국 간 수출입 관세 철폐율의 변화는 RCEP을 통해 양국 간 교역이 증가하면 일본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본이 RCEP에 가입한 또 다른 요인은 역내에서 자국의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원래 일본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한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던 TPP 협상에 2013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하였다. 중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아태지역 12개국에 참여한 TPP 협상은 미국의 주도로 2015년 10월에 타결되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TPP를 추진한 것은 미국과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심화시키고 중국 의존도를 줄여서 역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Norton et al. 2015). 그러나 2017년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TPP에서 탈퇴하자 11개국이 재협상을 진행하여 CPTPP가 2018년 3월에 체결되고 12월에 발효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부재 속에서 CPTPP 협상에서 리더십 역할을 통해 성공적 타결에 기여하였다. 이전에 다자협상에서 주도적이지 않았던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해 CPTPP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아태지역의 다자적 FTA 틀에서 이탈함으로써 생긴 리더십 공백을 메우는 한편, CPTPP를 통해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함이었다(Kim 2018; Mulgan 2018).

일본이 RCEP에 가입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CPTPP와 더불어 역내에서 높은 수준의 FTA와 이를 위한 통상 규칙을 확립하는데 주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RCEP 협상 및 회의에서 일본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문구는 ‘자유롭고 공정한 공동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었다. 즉, 역내 새롭게 구축되는 FTA에 대해 특정한 국가 및 불공정한 구조로 형성되는 것 아니라 공통된 규칙에 기반을 둔 구조를 지속해서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역내 공정한 경제 공동체를 구축할 뿐 아니라 경제 대국 일본이 역내에서 가졌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이다. 2018년 9월 UN 총회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이 “자유무역의 기수(a flag bearer for free trade)”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강조했다(Prime Minister of Japan and His Cabinets 2018).

이처럼 일본은 CPTPP 협정, 유럽연합(EU)과의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RCEP 협상 등에서 자유무역과 공정

한 규칙을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강조해 왔다. 또한 2019년 11월 아세안 정상회담 등과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은 RCEP 협상을 7년 동안 주도해 왔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규칙이 세워지는 경제 구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후임인 스가 총리도 2020년 11월 RCEP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다자간 FTA의 유지와 강화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역내 경제수역을 확대하는데 지속해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였다(일본 외무성 2020). 이러한 총리의 발언들은 일본이 RCEP을 통해 역내 다자간 FTA의 기준과 규범을 창출하는데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이 RCEP에 가입한 또 다른 요인은 CPTPP와 더불어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박창건 2020, 226-227). 일본은 RCEP이 자칫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FTA가 되지 않도록 협상 초기부터 참여하여 RCEP 세부 조항들을 정하고 논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했다. RCEP 통상 규칙의 수준에 관한 협상을 할 때도 일본은 중국과 주도권 다툼을 하였다. 또한 일본은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에 RCEP을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며 역내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RCEP 협상에서도 기존의 힘의 분포상태를 유지하며 앞으로 중국과 전략적 경제동반자로 나가는데 주도권을 어떻게 강화할지가 일본으로선 중요하다(楊光洙·金道堦 2019, 358-359).

이와 관련해서 IISS의 일본 연구책임자인 워드(Ward 2020)는 일본이 CPTPP를 통해 주요 아세안 회원국들(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부르나이), 호주, 뉴질랜드와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어서 RCEP 내에서 이러한 국가들과 연대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완화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타나카 아키히코 일본 국립정책연구원장은 RCEP을 중국 중심의 틀로 보는 견해에 대해 특정 국가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틀로 보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언급하며 RCEP의 다자간 틀 속에서 중국 또한 공통의 통상규칙을 준수하며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중국이 RCEP 규

정들로 인해 행동의 제약을 받을 것임을 의미한다(일본 경제산업성 2021). 즉 RCEP 규칙들이 중국의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 확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RCEP 협상의 막바지였던 2019년 가을에 인도가 RCEP 협상에서 탈퇴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인도가 참여하지 않는 RCEP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피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인도가 RCEP에 참여하는 것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부상하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해 일본·인도·호주 간 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시각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RCEP이 타결된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인도가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해왔다(Akimoto 2021). 이같이 일본 정부가 RCEP에 참여하는 것은 역내에 다자적 자유무역 질서를 구축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는 한편,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분석한 일본의 RCEP 가입요인들은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의 <명제 1>에 의해 적절히 설명된다. 즉, <명제 1>이 예측하듯이 일본은 RCEP을 통한 협력이 일본에 절대적인 경제적 이득을 효과적으로 가져오리라 판단해서 가입하였다. RCEP이 발효되면 일본의 수출이 확대되고 수입이 감소하여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무역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의 제1 교역상대국인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어서 대중국 교역이 증대되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되기 때문에 RCEP에 가입하였다. 일본이 RCEP에 가입한 또 다른 요인은 역내 자유무역 질서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CPTPP 타결에서의 리더십 역할과 더불어 아시아에서 자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유지하고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중국이 참여하는 RCEP에 가입하여 역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작용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신현실주의의 <명제 2>의 설명과 부합된다.

#### IV. RCEP 미(未)가입 요인 분석: 인도 사례

인도는 RCEP 협상 초기부터 주요 국가로 협상에 참여하였으나 협상 막바지였던 2019년 11월 RCEP 탈퇴를 선언하였다. 인도가 RCEP 협상에서 탈퇴한 요인은 RCEP 회원국들과의 무역수지 적자, 중국산 상품의 대량 유입 가능성, 농업과 일부 산업계의 반대, 국내 경기 침체, 과거의 FTA 통한 경제적 손실 경험 등으로 요약된다(Dutta 2019). 즉, RCEP 탈퇴의 주요 요인은 인도가 RCEP 가입을 통해 얻을 경제적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도가 RCEP 탈퇴를 발표한 것은 2019년 11월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차 RCEP 정상 회의에서였다. 당시 인도의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RCEP이 인도가 제기한 주요 쟁점 및 우려 사항이 충분히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RCEP 협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탈퇴를 선언하였다(*The Economic Times* 2019/11/5).

인도는 2013년 RCEP 협상 첫 회의부터 참여해왔는데, 1992년부터 추진해 온 아세안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향하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의 맥락에서 RCEP이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인도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2014). 또한 2017년 6월에 아세안-인도 파트너십에 대한 기조연설에서 스와라이(Sushma Swaraj) 외무장관은 아세안과의 협력은 상호이익이 되며 RCEP을 통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Indian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2017). 그러나 7년여에 걸친 RCEP 협상의 막바지에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퇴를 선언하였다.

인도가 RCEP을 탈퇴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RCEP 회원국들과의 무역적자, 특히 중국과의 만성적인 무역적자였다. 인도는 2010년에 한국과 일본, 2012년에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이래로 RCEP 회원국들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증가해 왔다. 그리하여 2018년~2019년에

RCEP 15개 회원국과의 무역적자는 1,050억 달러를 상회하였고 그 중 대중국 무역적자는 535억 달러로서 약 51%를 차지하였다. 중국과의 FTA가 없는 상황에서도 발생한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가 가장 우려한 것은 RCEP이 이행되면 중국 공산품 수입이 급증하여 관련 국내 제조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즉, 인도 정부는 RCEP을 통해 중국으로부터의 저가의 수입품이 대규모 유입되는 것이 중국과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더욱 심화시키고 관련 국내 산업을 위태롭게 할 경제적 위협이자 중국에 대한 상대적 손실로 간주하였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 낙농제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낙농업이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였다(Panda 2019, 83-84).

따라서 인도는 RCEP 협상에서 과도한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산업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RCEP 조항에 자동 격발(automatic trigger) 메커니즘이 포함하기를 요구했다. 이는 수입 물량이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한 지정 한도를 넘는 경우 관세 혜택을 자동으로 철회할 수 있는 보호 장치인데 여타 회원국들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하였다(Choudhury 2019). 또한 인도는 협상 과정에서 RCEP 회원국들과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인도와 FTA를 체결한 국가(아세안, 한국, 일본)와 체결하지 않은 국가(중국, 호주, 뉴질랜드)를 구분해서 차별적 관세 인하를 원하였다. 그러나 RCEP 회원국들은 차별 없이 92% 수준의 관세 철폐를 요구했기 때문에 인도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또한 인도 정부는 관세 인하의 시기를 늦추기 위해 협상 초기에 합의되었던 기준 년도 2014년을 2019년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모디 인도 정부가 2014년 9월부터 추진해 온 국내 제조업 성장을 목표로 하는 ‘인도 국내 생산(Make in India)’ 정책의 일환으로서 최근 3년간 일부 주요 수입품목의 관세를 인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도 협상 막바지에 수용되지 않았다. 이 밖에 인도는 최혜국대우(MFN) 적용, 전자상거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메커니즘 등과 관련한 쟁점을 둘러싸고 여타 회원국들과 막바지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합

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Gaur 2020, 8-12; Seshadri 2019, 90-91; Wang and Sharma 2012, 42-47). 인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이러한 요구들에 대한 합의가 실패하자 인도는 RCEP의 절대적 이득보다는 상대적 손실이 크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이러한 손익 계산이 탈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 다른 탈퇴 요인은 국내 주요 산업계와 야당의 반대였다. 인도 정부는 국내 산업계 대표들과 RCEP 관련 협의를 해왔는데 주요 산업계 대표들은 RCEP 협상을 반대하거나 유보적 입장이었는데 주된 이유가 중국산 제품들의 대규모 유입으로 국내 제조업 성장을 저해하고, 일자리를 줄여서 수출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The Hindu*, 2019/11/5). 특히 국제경쟁력이 약한 철강, 자동차, 화학, 낙농업, 농산물 등 분야의 이익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하였다. 한 연구에서는 주요 경제단체인 인도산업연합회(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와 상공회의소연맹(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의 RCEP 협상 조건에 대한 반대 운동과 더불어 철강 및 농업 부문 이익단체들의 대정부 로비가 인도 정부의 탈퇴 결정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한다(Singh and Singh 2020). 또한 중소기업들을 대표하는 전인도무역연합회(Confederation of All India Traders)도 반대하였고, 낙농업과 농민단체들은 야당과 연대하여 대규모 반대 시위를 전개함으로써 정부에 탈퇴 압력을 행사하였다(Gupta and Ganguly 2020; Haidar and Raghavan 2019). 이러한 국내정치적 반대는 탈퇴 결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 하나의 탈퇴 요인은 인도가 중국과 아시아와 인도양 지역에서 지정학적 경쟁과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Wang and Sharma 2021, 48-53; Priya and Ghosh 2020). 인도는 중국과 1962년 10~11월 히말라야 국경을 둘러싼 전쟁 이후, 지속적인 국경 분쟁을 해왔다. 최근에는 2017년 6~8월에 인도-중국-부탄 국경 지역인 도클람(Doklam)에서의 분쟁, 2020년 6월에 히말라야 접경지역인 라다크(Ladakh)에서 군사적 충돌 등으로 갈등 관계를 이어왔다. 게다가



가 인도는 중국의 경제력 및 군사력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11월에 재결성된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와 쿼드 하에 실시되는 ‘말라바르(Malabar)’ 연례 합동군사훈련에 참여해왔다. 이는 역내에서 증대되는 중국의 영향력과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안보 전략에 따른 움직임이다.

또한 인도는 2014년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래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 호주, 한국 등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추진해 왔다(조원득 2018, 12-26). 따라서 중국이 아시아와 인도양 지역에서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일대일로 사업이 남아시아와 아세안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여 인도의 지위와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는 일대일로 사업에서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에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것이 인도의 세력권을 침식한다고 우려해왔다(Wang and Sharma 2021, 48-50). 결국 중국과의 국경 분쟁 등 갈등과 아시아와 인도양에서의 양국 간 세력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RCEP이 타결되어 중국의 역내 영향력이 확대되고 상대적 지위가 강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인도 정부는 RCEP 참여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는 RCEP을 통해 협상에 참여하면서 절대적인 경제적 이득보다 역내 국가들, 특히 중국에 대한 상대적 손실을 우선시하게 되고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제적 세력 경쟁이 전개되면서 RCEP 가입 여부를 주로 중국과의 역학관계에서 상대적 손익의 관점에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해석은 탈퇴 당시에 인도 정부의 고위 관리들의 설명으로 뒷받침된다. 샤(Amit Shah) 인도 내무장관은 RCEP 탈퇴 이유로서 “중국의 이익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인도의 산업들을 확고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Shah 2019). 또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은 RCEP이 “아무도 원치 않는” 인도와 중국 사이의 FTA가 되었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 탈퇴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이며, 이는 “외교가 무역보다 우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도 정부의 결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The Financial Express*. 2019/12/17). 이러한 탈퇴 요인은 신현실주의의 <명제 3>에 의해 적절히 설명된다. 즉, <명제 3>에서 예측하는 것과 같이 인도가 RCEP을 탈퇴한 주요 요인은 RCEP을 통한 협력이 중국에 대해 자국의 상대적 손실을 초래하여 상대적 영향력과 지위가 저하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파악된다. 물론 국내 정치적 반대도 탈퇴 결정의 한 요인이었지만 국내적 반대의 주요 이유도 상당 부분 RCEP을 통한 중국과의 교역 관계에서 발생할 상대적 손실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그간 여러 연구에서는 인도가 RCEP에 참여하면 얻게 될 경제적, 안보적 이득을 예측하였다. 우선 PIIE의 연구에서는 RCEP에 참여하면 인도의 총소득이 매년 600억 달러 증가하는 반면 참여하지 않는 경우 매년 60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다(Petri and Plummer 2020, 5). 또한 인도가 RCEP에 가입하면 역내 생산 네트워크가 통합되어 경제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국내 기업들도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경제적 이점이 기대되었다(Choudhury 2019). 또한 인도가 역내 자유무역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 경제적 유대관계를 재정립하고 대내외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Gupta and Ganguly 2020). 반면에 RCEP에 참여하지 않으면 얻게 될 경제적 손실은 정부의 탈퇴 결정에 대한 인도 산업연합회의 성명에 언급되어 있다. 이 성명에서는 RCEP에 참여하지 않으면 역내 시장의 우선적 접근에서 배제되고, RCEP 회원국의 인도 내 투자가 억제되어 역내 및 글로벌 가치 사슬로 통합되려는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가입 협상을 촉구하였다(*The Economic Times* 2019/11/3) 이러한 시각은 인도가 RCEP에 가입하면 여러 경제적 이득이 예상되지만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중대한 손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게다가 인도가 RCEP에 참여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 호주-인도-일본의 네트워크가 공고해져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지역적 응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한 RCEP을 통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여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인도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Wang and Sharma 2021, 52). 이러한 시각들에 비추어 볼 때 인도가 RCEP에 참여하면 여러 경제적, 안보적 이익이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가 RCEP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신자유주의의 <명제 1>에 의해 적절히 설명되지 않는다.

## V. 결론

이 논문에서는 RCEP에 가입한 역내 주요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이 RCEP에 가입한 요인들과 인도가 가입하지 않은 요인들을 파악하여 국제레짐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한국이 RCEP에 가입한 주요 요인은 역내에서 교역의 확대를 통한 절대적인 경제적 이득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명제 1>의 설명과 부합된다. 또한 RCEP 가입은 중국과 일본에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아세안 지역과의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하여 역내에서 한국의 상대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의 <명제 2>의 설명과 부합된다. 둘째, 중국이 RCEP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가입한 주요 요인도 경제적 이득으로서 신자유주의의 <명제 1>의 설명이 타당하다. 또 다른 주요 요인은 동아시아에서 주도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반영한 통상 규칙을 제정하고 다자적 협력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지위와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의 <명제 2>의 논리와 부합된다.

셋째, 일본도 절대적인 경제적 이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RCEP에 가입하였는데 이는 신자유주의의 <명제 1>의 설명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일본은 미국을 대신해서 RCEP을 통해 아·태지역에 수준 높은 다자적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길 원한다. 게다가 RCEP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

다. 이러한 요인들은 신현실주의의 <명제 2>가 일본의 사례에서도 적실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인도가 협상 막바지에 RCEP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주요 요인은 중국에 대한 상대적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특히 RCEP이 발효되면 예상되는 대규모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와 그에 따르는 국내 산업에 대한 악영향으로 인해 가입을 포기하였다. 게다가 역내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과 안보적 갈등 속에서 RCEP을 통한 상대적인 손실이 인도의 지위와 영향력 저하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신현실주의의 <명제 3>의 설명에 부합된다.

이러한 사례연구의 결과는 다음 두 가지 이론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신자유주의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RCEP과 같이 경제적 후생과 관련되고 참가국이 다수인 국제레짐의 경우에 상대적 이득보다는 절대적인 경제적 이득이 국제레짐을 창출하고 참여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한국, 중국, 일본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경제 강국인 3국은 RCEP에 참여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향후 역내에서 경제적 이득을 더욱 증대하고 전략적 이득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국에 유리한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신현실주의 <명제 2>에 의해서 적절히 설명된다. 따라서 RCEP과 같은 다자적 국제무역레짐 사례에서는 경제 강국들의 가입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데 두 이론적 시각은 상충하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이다.

둘째, RCEP 불참을 결정한 인도 사례에서처럼 국가들이 국제레짐을 통한 협력을 거부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상대적 손실이 중시되는 조건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이론적 타당성을 논할 수 있다. 스니달(Snidal 1993, 193, 201)은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협력의 장애로 간주되는 상대적 이득 요인이 두 가지 경우에 오히려 협력의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파악한다. 하나는 국가들이 여타 국가 간 협력에 따르는 상대적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협력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국제협정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 상대적 이득을 달성하

려는 경우이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이 RCEP에 가입한 요인 중 하나가 역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는데 이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이 RCEP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요인 중 하나가 RCEP에 불참하는 미국에 대하여 상대적 이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두 번째 경우를 입증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관련해서 RCEP 가입 및 미가입 요인들을 더욱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RCEP의 협상 과정에 관한 분석과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등 여타 가입국에 관한 사례연구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내외 논문 및 단행본>

- 김민성. 2020. “RCEP의 주요 합의 내용과 기대효과.” FTA Trade Report, Vol. 1, March, <https://www.origin.or.kr/download.do?uuid=2e737835-5d9b-4b0c-8bf8-8de6e6fcff5c.pdf> (검색일: 2021/10/10).
- 김희중. 2021. “RCEP 서명에 따른 CPTPP와의 협정문 주요 내용 비교 분석.” 『법학논총』, 49, 141-17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3. “RCEP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https://www.fta.go.kr/rcep/apply/2/> (검색일: 2021/8/16).
- . 2017.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 17-3, 8월 22일,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act=view&list\\_no=2212&cg\\_code=C03](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act=view&list_no=2212&cg_code=C03) (검색일: 2021/10/20).
- . 20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잠정타결: 의미와 시사점.” 11월19일,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act=view&list\\_no=3434&cg\\_code=](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act=view&list_no=3434&cg_code=) (검색일: 2021/10/15).
- 박창건. 2020. “일본의 아태지역 통상정책 다각적 양면-연계론으로 분석한 CPTPP와 RCEP의 정책 수렴.” 『일본공간』, 28, 203-243.
- 오수현 외 4인. 20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9(24), 1-16.
- 오수현 외 2인. 20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세계경제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36),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30000&bid=0004&act=view&list\\_no=3552&cg\\_code=](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30000&bid=0004&act=view&list_no=3552&cg_code=)
- 조원득. 2018. “모디 인도 정부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과 동아시아.” 정책연구시리즈 2018-25,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pblctDtaSn=13392&clCode=P03&menuCl=P03> (검색일: 2021/10/10).
- 한국경제연구원. 2021. “한·일 정치외교 갈등으로 교역량 -11.9%, 양국 경제 모두 타격.” 5월 25일. [http://www.keri.org/web/www/news\\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6185](http://www.keri.org/web/www/news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6185) (검색일: 2021/10/25).
- 邢思遙·김현. 202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및 미가입 요인 분석: 한국, 영국, 미국,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23(4), 95-112.
- 楊光洙, 金道堦. 2019. “アジア太平洋地域の經濟連携と日本の戰略.” 『日本近代學研究』, 65, 347-361.
- Akimoto, Daisuke. 2021. “The RCEP Conundrum: Japan Awaits India’s Return.” *The Diplomat*, August 27, <https://thediplomat.com/2021/08/the-rcep-conundrum-japan-awaits-indias-return/> (검색일: 2021/10/30).

- Axelrod, Robert, and Robert O. Keohane. 1985.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Strategies and Institutions." *World Politics*, 38(1), 226-254.
- Choudhury, Rahul Nath. 2019. "Why did India betray RCEP?" *East Asia Forum*, December 21. <https://www.eastasiaforum.org/2019/12/21/why-did-india-betray-rcep/> (검색일: 2021/8/20).
- Chow, Daniel. 2016. "Why China Established the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Vanderbilt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9, 1255-98.
- Drysdale, Peter, and Shiro Armstrong. 2021. "RCEP: a strategic opportunity for multilateralism." *China Economic Journal*, 14(2), 128-143.
- Dutta, Prabhash K. 2019. "5 Reasons Why PM Modi Pulled Out of RCEP in Bangkok." *India Today*, November 5. <https://www.indiatoday.in/news-analysis/story/5-reasons-why-pm-modi-pulled-out-rcep-in-bangkok-1615825-2019-11-05> (검색일: 2021/8/19).
- Gaur, Pankhuri. 2020. "India's withdrawal from RCEP: neutralising national trade concerns." *Journal of the Asia Pacific Economy*, August 24, 1-19.
- Glaser, Charles. 1995. "Realists as Optimists: Cooperation as Self-help." *International Security*, 19(3), 50-90.
- Grieco, Joseph. 1988., "Anarchy and the Limits of Cooperation: A Realist Critique of the Newest Liberal Institut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3), 485-507.
- 1990. *Cooperation among Nations: Europe, America, and Non-Tariff Barriers to Trad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1993. "Understanding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Limits of Neoliberal Institutionalism and the Future of Realist Theory." in David Baldwin (ed.),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The Contemporary Debate*,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301-338.
- Gupta, Surupa and Sumit Ganguly. 2020. "Why India Refused to Join the World's Biggest Trading Bloc." *Foreign Policy*, November 23, <https://foreignpolicy.com/2020/11/23/why-india-refused-to-join-rcep-worlds-biggest-trading-bloc/> (검색일: 2021/6/24).
- Hu, Weixing, and Weizhan Meng. 2020.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nd China's Response." *The China Review*. 20(3): 143-176.
-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IDE), 2021. "Economic Impacts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nalysis Using IDE-GSM." April 19, <https://www.ide.go.jp/Japanese/Publish/Reports/AjikenPolicyBrief/147.html> (검색일: 2021/10/30).
- Keohane, Robert. 1984.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 1989. "Neoliberal Institutionalism: A Perspective on World Politics." in Robert Keohane (e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Essay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21.
- Kim, Eunseo. 2018. "The CPTPP and Its Implications for Japan." *The Diplomat*, May 4, <https://thediplomat.com/2018/05/the-cptpp-and-its-implications-for-japan/>(검색일: 2021/10/30).
- Kimura, Fukunari. 2021. "RCEP from the middle powers' Perspective." *China Economic Journal*, 14(2), 162-170.
- Krasner, Stephen D. 1983.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in Stephen D.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 1993a. "Sovereignty, Regimes and Human Rights." in Volker Rittberger (ed.), *Regime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39-67.
- , 1993b. "Global Communications and National Power: Life on the Pareto Frontier." in David Baldwin (ed.),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The Contemporary Debate*.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234-249.
- Leonard, Eric K. 2005. *The Onset of Global Governance: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urlington, VT: Ashgate Publishing Company.
- McGinnis, Michael. 1986. "Issue Linkage and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0(1), 141-170.
- Mulgan, Aurelia G. 2013. "Japan's Entry into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Domestic Priorities and Regional Dynamics."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July 9. <https://www.nbr.org/publication/japans-entry-into-the-trans-pacific-partnership/>(검색일: 2021/8/17).
- , 2018. "CPTPP a booster for Japan's regional trade leadership." *East Asian Forum*, February 27, <https://www.eastasiaforum.org/2018/02/27/cptpp-a-boost-for-japans-regional-trade-leadership/>(검색일: 2021/8/17).
- Naughton, Barry, et. al. 2015. "What will the TPP Mean for China?" *Foreign Policy*. October 7, <https://foreignpolicy.com/2015/10/07/china-tpp-trans-pacific-partnership-obama-us-trade-xi/>(검색일: 2021/10/30).
- Panda, Rajaram. 2019. "A Step Too Far: Why India Opted Out of RECP." *Global Asia*, 14(4), December, [https://www.globalasia.org/v14no4/feature/a-step-too-far-why-india-opted-out-of-rcep\\_rajaram-panda](https://www.globalasia.org/v14no4/feature/a-step-too-far-why-india-opted-out-of-rcep_rajaram-panda)



- (검색일: 2021/10/15).
- Petri, Peter, and Michael Plummer. 2020. "East Asia Decouples from the United States: Trade War, COVID-19, and East Asia's New Trade Bloc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June, <https://www.piie.com/system/files/documents/wp20-9.pdf> (검색일: 2021/10/11).
- Priya, Prachi and Aniruddha Ghosh. 2020. "India's Out of RCEP: What's Next for the Country and Free Trade?" *The Diplomat*, December 15, <https://thediplomat.com/2020/12/indias-out-of-rcep-whats-next-for-the-country-and-free-trade/> (검색일: 2021/06/24).
- Seshadri, V. S. 2019. "RCEP and India: What Next?" *Indian Foreign Affairs Journal*, 14(2), 87-102.
- Shah, Amit. 2019. "View: By saying no to RCEP, PM Narendra Modi has kept India first." *The Economic Times*, November 13,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foreign-trade/view-by-saying-no-to-rcep-pm-modi-has-kept-india-first/articleshow/72028437.cms?from=mdr>(검색일: 2021/10/24).
- Shimizu, Kazushi. 2021.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and the RCEP in the World Economy." *Journal of Contemporary East Asia Studies*. 10(1). 1-23.
- Singh, Surendar and Ram Singh. 2020. "Domestic Sources of India's Trade Policy Preferences in RCEP Negotiations." *Journal of World Trade*, 54(4), 503-530.
- Snidal, Duncan, 1993. "Relative Gains and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David Baldwin (ed.)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The Contemporary Debat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70-207.
- Terada, Takashi. 2018. "RCEP Negotiations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December 20, <https://www.nbr.org/publication/rcep-negotiations-and-the-implications-for-the-united-states/> (검색일: 2021/10/13)
- United Overseas Bank(UOB) and Institute for Emerging Market Studies of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20.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 ASEAN." December, file:///D:/0.%20user/Downloads/hkustiems-uob\_bri\_overview.pdf (검색일: 2021/11/2).
- Ward, Robert. 2020. "RCEP Trade Deal: A Geopolitical Win for Chin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November 25. <https://www.iiss.org/blogs/analysis/2020/11/rcep-trade-deal> (검색일: 2021/8/15).
- Wang, Chao and Vinay Sharma. 2021. "India's RCEP Dilemma with China: Beyond the Legal Texts." *Pacific Focus*, 36(1), 40-62.
- Yoo, In Tae, and Charles Wu. 2021. "Way of Authoritarian Regional Hegemon? Formation of the RCEP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October, 1-15.

Zhang, Zoey. 2021. "Developing Your China Trade with Japan and South Korea Under RCEP." *China Briefing*, June 28, <https://www.china-briefing.com/news/developing-your-china-trade-with-japan-and-south-korea-under-rcep/> (검색일: 2021/10/20).

<정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3.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제1차 공식 협상 결과." 보도자료, 5월 14일. [http://www.motie.go.kr/motie/ne/rt/press/bbs/bbsView.do?bbs\\_seq\\_n=77936&bbs\\_cd\\_n=16](http://www.motie.go.kr/motie/ne/rt/press/bbs/bbsView.do?bbs_seq_n=77936&bbs_cd_n=16) (검색일: 2021/8/20).

----- 20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 선언." 보도자료, 11월 5일. <https://www.fta.go.kr/rcep/paper/1/> (검색일: 2021/8/20).

----- 2020.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정책브리핑, 11월 16일.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018> (검색일: 2021/8/20).

인도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2017. "Keynote Address by External Affairs Minister on ASEAN-India Partnership." 성명서, 6월 22일. <https://mea.gov.in/Speeches-Statements.htm?dtl/28550/keynote+address+by+external+affairs+minister+on+aseanindia+partnership> (검색일: 2021/6/24).

인도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2014. "Brief on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https://commerce.gov.in/international-trade-trade-agreements-indias-current-engagements-in-rtas/brief-on-regional-comprehensive-economic-partnership-rcep/>(검색일: 2021/8/20).

일본 외무성. 2020. "The 4th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Summit and RCEP Agreement Signing Ceremony." 11월 15일. [https://www.mofa.go.jp/policy/economy/fta/page1e\\_000291.html](https://www.mofa.go.jp/policy/economy/fta/page1e_000291.html) (검색일: 2021/10/25).

----- 2021. "RCEP協定の経済効果分析." 3월 19일, <https://www.mofa.go.jp/mofaj/files/100162437.pdf>

일본 경제산업성. 2021. "One of the world's largest economic partnerships, its significance and business opportunities." *Meti Journal*, 3월 12일. <https://www.meti.go.jp> (검색일: 2021/6/23).

Prime Minister of Japan and His Cabinets. 2013a. "Industrial Competitiveness Council." 연설문, 3월 15일. [https://japan.kantei.go.jp/96\\_abe/actions/201303/15sangyoukyousou\\_e.html](https://japan.kantei.go.jp/96_abe/actions/201303/15sangyoukyousou_e.html) (검색일: 2021/8/17).

----- 2014. "The 13th IISS Asian Security Summit -The Shangri-La Dialogue - Keynote Address by Prime Minister Abe." 성명서, 5월 30일. [https://japan.kantei.go.jp/96\\_abe/statement/201405/0530kichokoen.html](https://japan.kantei.go.jp/96_abe/statement/201405/0530kichokoen.html) (검색일: 2021/8/17).

----- 2018. "Address by Prime Minister Abe at the Seventy-Third

-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성명서, 9월 25일. [https://japan.kantei.go.jp/98\\_abe/statement/201809/\\_00005.html](https://japan.kantei.go.jp/98_abe/statement/201809/_00005.html) (검색일: 2021/8/17).
- 중국 외교부. 2014. “外交部部长助理刘建超在丝绸之路合作亚洲合作对话论坛开幕式上的讲话.” 외교부 신문, 5월 29일. [https://www.fmprc.gov.cn/mfa\\_eng/wjbxw/t1160687.shtml](https://www.fmprc.gov.cn/mfa_eng/wjbxw/t1160687.shtml) (검색일: 2021/6/23).
- 2016. “外交部长王毅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记者提问.” 기자회견, 3월 8일. [https://www.fmprc.gov.cn/web/wjb\\_673085/zzjg\\_673183/xybfs\\_673327/dqzzhzhz\\_673331/zgalb\\_673389/xgxw\\_673395/t1346052.shtml](https://www.fmprc.gov.cn/web/wjb_673085/zzjg_673183/xybfs_673327/dqzzhzhz_673331/zgalb_673389/xgxw_673395/t1346052.shtml) (검색일: 2021/6/23).
- 청와대. 2019.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왜 중요할까요?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RCEP 정상회의」.” 11월 5일.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7525> (검색일: 2021/8/20).
- 20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보도자료, 11월 15일.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9511> (검색일: 2021년 6월 3일).
- U.S. Department of Defense. 2019.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June 1, <https://media.defense.gov/2019/Jul/01/2002152311/-1/-1/1/DEPARTMENT-OF-DEFENSE-INDO-PACIFIC-STRATEGY-REPORT-2019.PDF> (검색일: 2021/11/5).

<언론 자료>

- Haida, Suasini, and Sharad Raghavan. 2019. “India storms out of RCEP, says trade deal hurts Indian farmers.” *The Hindu*, November 4,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india-decides-against-joining-rcep-trade-deal/article29880220.ece> (검색일: 2021/10/15).
- “China has officially ratified RCEP deal: commerce.” *Xinhua*, March 8, 2021, [http://www.xinhuanet.com/english/2021-03/08/c\\_139794703.htm](http://www.xinhuanet.com/english/2021-03/08/c_139794703.htm) (검색일: 2021/6/23).
- “Exporters, industry laud India’s decision to pull out of RCEP.” *The Hindu*, November 5, 2019, <https://www.thehindu.com/business/exporters-industry-laud-indias-decision-to-pull-out-of-rcep/article29891376.ece> (검색일: 2021/10/15).
- “India decides to opt out of RCEP, says key concerns not addressed.” *The Economic Times*, November 5, 2019,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foreign-trade/india-decides-to-opt-out-of-rcep-says-key-concerns-not-addressed/articleshow/71896848.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foreign-trade/india-decides-to-opt-out-of-rcep-says-key-concerns-not-addressed/articleshow/71896848.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 (검색일: 2021/6/15).
- “Not being part of RCEP will harm India's exports and investment flow, says CII.” *The Economic Times*, November 3, 2019, <https://economic>

times.indiatimes.com/news/economy/foreign-trade/not-being-part-of-rcep-will-harm-indias-exports-and-investment-flow-says-cii/articleshow/71876218.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 (검색일: 2012/10/15).

“RCEP trade pact seen boosting Japan/s GDP by 2.7%.” March 19, 2021,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japan-economy-rcep-id-USKBN2BB193> (검색일: 2021/8/20).

“Why India pulled out of RCEP? Piyush Goyal defends govt’s controversial move.” *The Financial Express*, December 17, 2019, <https://www.financialexpress.com/economy/why-india-pulled-out-of-rcep-piyush-goyal-defends-govts-controversial-move/1796469/> (검색일: 2021/6/5).

투고일 : 2021년 11월 14일 . 심사일 : 2021년 11월 24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11월 28일
---

\* 서진희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고 국제환경거버넌스에 관한 학위논문을 준비 중임.

\* 김 현은 미국 City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음. 주요 논문으로는 “Comparing North Korea Policies of the Obama and Trump Administrations,” (2017), “A Theoretical Account of the International Multilateral Negotiation of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2019) 등이 있음.

## &lt;Abstract&gt;

**An Analysis of Factors Behind Joining or Not Joining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 Cases of South Korea, China, Japan, and India**

Jinhee Seo·Hyun Kim  
(Kyung Hee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plain factors for South Korea, China, and Japan respectively to jo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which was concluded in November 2020, as well as factors for India not to join i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regime theory. First, the main factor that South Korea joined was because it expected economic gains through trade expansion, as explained by neoliberalism. In addition, as predicted by the neorealist theory, another factor came from the intention of South Korea to enhance its relative position and influence by strengthening comprehensive cooperation with the ASEAN. Second, the main factor for China's accession to the RCEP was anticipated economic gain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explanation of neoliberal theory. As predicted by the neorealist theory, China intended to increase its position and influence by taking the initiative in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multilateral trade cooperation in East Asia. Third, Japan joined the RCEP mainly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benefits, as predicted by neoliberalism. It also intended to demonstrate leadership in establishing a high-level multilateral free trade order through the RCEP. These factors are also consistent with a neorealist explanation. Fourth, the main reason that India did not join the RCEP was that it expected relative economic losses to China

through the RCEP which, in turn, would weaken its relative position and influence in competition with China. This factor is adequately explained by the neorealist theory.

**Keywords**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ternational Trade Regime, Multilateral FTA, Neoliberal Institutionalism, Neorealism